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11차시. 신용정보법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신용정보법과 데이터3법의 의의
2. 데이터3법 목적실현을 위한 개정의 주요 내용
3.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
4. 구체적 법령해석 사례

▶ 학습목표

1.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마이데이터산업을 설명할 수 있다.
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신용정보법과 데이터 3법의 의의

1. 신용정보법과 빅데이터산업

먼저 신용정보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신용정보법이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여,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에 법률 제4866호로 제정되고, 6개월 후인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금융거래에서 필수적인 신용정보는 오늘날 대표적인 디지털정보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룬다. 4차 산업혁명에 터잡은 정보화시대에서 신용정보는 그야말로 빅데이터산업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은 단순히 데이터 3법 중의 하나로서의 역할만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데이터3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개정이유

데이터 3법 목적에 따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용정보법도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57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당시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금융데이터, 신용데이터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해외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한 맞춤형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법 이전의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부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다.

또 다른 개정이유는 다른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맞물린 개정이다. 즉 이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관련한 유사내용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및 개인정보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보호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규제혁신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신용정보법의 2020년 2월 4일 개정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

리를 강화하는 등으로 당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3. 신용정보화서비스와 신용정보활용의 문제

정보화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 21세기는 20세기의 산업사회와 달리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모바일산업의 발달은 금융사업의 진화도 가져왔다. 즉 일상으로 자리잡은 모바일이 개인의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신용모바일서비스를 시행하고 개인은 이러한 신용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감한 이러한 신용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빅데이터산업의 가장 큰 과제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이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과 그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화서비스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즉 개인사업자 및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신용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은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그 활용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은 공공이익 또는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개인사업자 및 민간기업에서의 신용정보활용은 그들의 이익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사업자·민간기업과 그리고 활용된 신용정보의 주체 사이에서 과연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이익의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부여를 어떻게 실현할지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데이터 3법이 논의되던 당시에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결합된 정보화기반산업의 발달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바일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융산업분야도 빠르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모바일금융산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은 이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 되었다. 이때 금융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개인의 신용정보는 정밀하고 전문적인 신용평가(작업)를 위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개인의 신용정보들이 수집·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개인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비패턴과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 및 현재의 재정상태 등이 결합되어야 보다 정확한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는 보다 정확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동시에 민감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므로 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II. 데이터 3법 목적실현을 위한 개정의 주요 내용

데이터 3법 목적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내용은 상당히 많다. 즉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만큼이나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
--

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생성·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제6항, 제20조제4항·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검사권·출입권·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 어.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데이터3법 목적에 따라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 관련 산업규정의 선진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데이터3법 목적에 따른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체계화’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즉 기존 신용정보의 수집, 생성, 제공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다소 난해하게 정의되었던 기존 신용조회 업무의 개념과 범위도 미래의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전제로 하여 정밀하게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MyData,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기업 신용 조회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 신용정보 산업을 신설함과 동시에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의 특성에 맞게 정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신용정보 기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타당하게 정비함과 함께 법적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기업신용조회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은 신용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러한 사업 관한 규정

들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해당 업종의 신규진입, 창업, 사업구성 및 영업요건 등 상세 실무 중심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업종 중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장성과 미래가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는 금융 및 신용기관이 아닌 바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슈이다. 마이데이터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명확하게 법제화됨에 따라, 데이터3법 이후 국내산업도 급변화하였으며, 비단 신용 및 금융 관련 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에서도 마이데이터 관련한 새로운 산업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 데이터 3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본격화
- 신용평가시장의 확대
-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

한편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 조회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분야 산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였다. 겸업을 허용하는 경우, 자칫 금융질서를 해치고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전에는 영리목적의 다른 분야 산업 겸업금지를 규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없는 한, 영리목적이라 하더라도 겸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처럼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업계에 대해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기업, 온라인 포털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게 신용 관리업 분야로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다른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정보화시대의 빅데이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금융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대표적인 개정내용은 신용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의 합리적 분석과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재규정과 함께,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명확한 개념 규정 및 활용범위를 새롭게 지정하였다. 더불어 신용정보법 개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신용정보(일반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을 포괄)의 융합, 결합,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 금융분야 빅데이터분석·이용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상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나아가 신용정보의 적극적 활용, 결합, 처리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

한 처벌규정도 개정하였다. 다양한 행위태양에 따른 세분화된 처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불법적인 용도나 의도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신용정보법 제42조의2)
- ▶ 데이터전문기관이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집합물을 전달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용정보법 제52조)
- ▶ 암호화에 따른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용정보법 제52조)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신설: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데이터 3법 목적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보관·축적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나 신용정보 관리 회사로 전송하도록 요구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2020년 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용정보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가 없었다.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은 특정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만이 독자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었으며,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해서 조차 관리되는 소극적 지위에 있었을 뿐 어떤 결정을 행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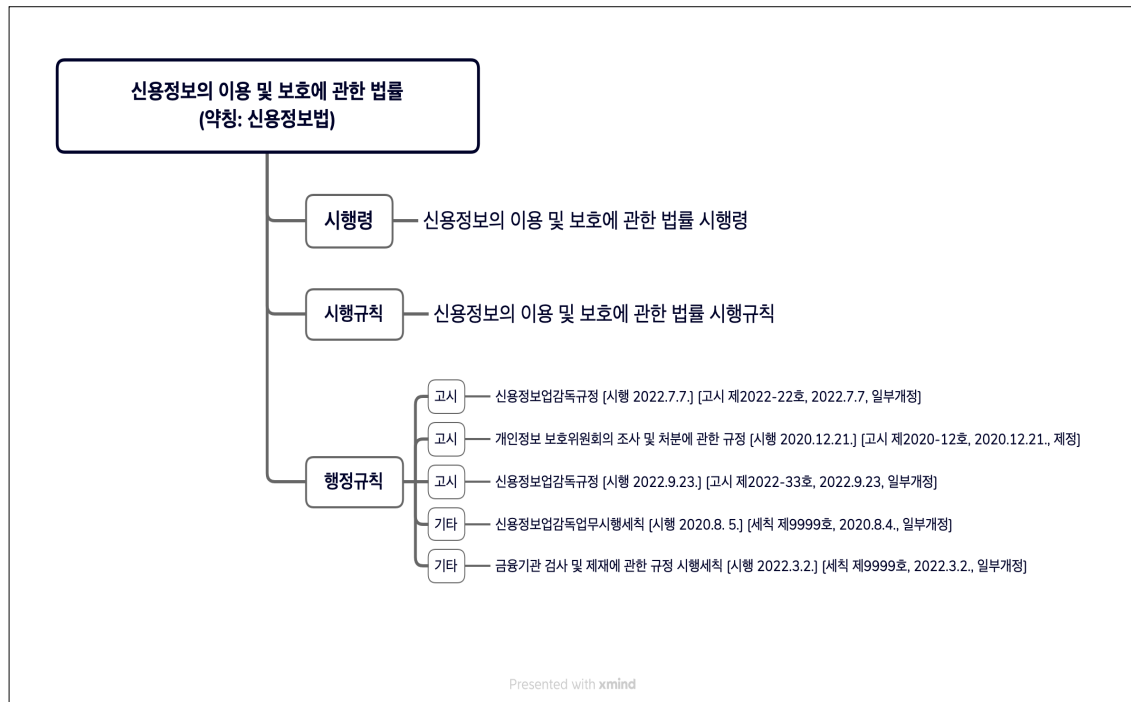
그러나 2020년 개정 신용정보법 부터 이제 신용정보의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 및 관리하는 적극적인 지위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제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받게 되며, 이로부터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로부터 다른 기관 및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신설되었다. 이를 바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라 부른다.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신용정보법에 신설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권’은 데이터3법의 목적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III.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

1. 개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1995년 1월 5일에 제정되었다. 현재까지 40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목적에 따른 개정이 현행 신용정보법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후 세 차례(2020년 6월 9일, 2020년 12월 29일, 2021년 4월 20일) 더 개정되었으나 대부분 타법개정에 따른 변경을 반영하는 것에 그칠 뿐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데이터 3법 목적에 따른 2020년 2월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2. 신용정보법의 체계도



신용정보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외에, 다양한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이 있다.

3. 마이데이터 산업

1) 도입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핵심은 ‘마이데이터’산업이다. 즉 신용정보법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2020년 ‘마이데이터 산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자 국내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산업은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20여곳에 달하는 기업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희망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업이나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네이버, KT 등의 IT 기업까지 이 산업에 뛰어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유관기업과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마이데이터 사업의 유관기관

마이데이터사업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이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과금기준마련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021년에는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였다.

2) 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사이트(www.mydatacenter.or.kr)도 개설되었다. 동 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업종	사업자명단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보험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여신전문금융	국민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롯데카드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사	NICE평가정보, KCB
IT	LG CNS
핀테크	toss, Naver Financial, banksalad, PAYCO, kakaopay, Hecto Innovation, Habit Factory, 한국신용데이터, 쿠콘, FinsetN, teamwink, BOMAPP, Finda, Fintech, SKplanet, Finng, bankQ, UBIVELUX, fint, FnGuide, codef, HN Fincore 등
통신	SK telecom, kt, LG U+
전자금융	11번가

이처럼 이제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데이터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라던가 실제 지출패턴을 신용카드나 온라인상점 구매를 통해서 파악가능하고, 또한 거주지 인근의 다양한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취향 패턴이 분석되어 쇼핑정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 시행 이전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한 금융사, 유통사, 제조사에 각각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분석한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는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신용정보(개인정보) 보호는 일반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여서 그동안 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에 비중을 높여온 바 신용정보(개인정보)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왔던 데에 기인한다.

하지만 빅데이터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편리함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제 마이데이터산업은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

으로 이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사업은 희망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활성화하는 서비스인 만큼 무엇보다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정보에 대한 기술적·인적·경제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마이데이터사업을 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허가요건

요건	개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감독규정
자본금	• 최소 자본금 5억원	제6조 2항 1호의 4		
물적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보안체계의 적정성	제6조 1항 1호	제6조 1항 5호, 2항 2호	<별표2>
사업계획 타당성	•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 •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이해상충 방지 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제6조 1항 2호	제6조 3항	
대주주 적격성	•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제6조 1항 3호	제6조 4항 <별표 1의2>	제7조 <별표2의2>
임원자격	• 선임(예정)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	제6조1항 3호의2, 제22조1항, 지배구조법 제5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전문성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제6조1항 4호		

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일반적인 정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의 법제도적 근거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서 마련되었다. 다만 동법 조문의 이름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로 되어 있으므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구현은 바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의 신설로 이해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제 마이데이터의 법적 정의는 ‘고객이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제1항).

1) 금융회사 등의 전송요청 대상기관

먼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요구의 상대방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금융회사 등의 전송요청 대상기관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 공공기관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
|---|

즉 신용정보는 금융회사 및 본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2) 요청된 전송 상대 기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상대방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송요구 상대자는 다음과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고객)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위에서 제5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3) 전송요구 가능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설령 정보주체인 본인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 관리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6항에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 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
|---|

2.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4. 제18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전송요구 방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그러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화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3항 단서).

5)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예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동조 제7항 단서).

그런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위의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 및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그리고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

지 아니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6항).

6) 전송요구 철회 및 전송요구의 거절 또는 전송의 정지·중단

한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7항).

그리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8항).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1항).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33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이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2항).

7) 가명정보에 대한 예외

한편 신용정보회사들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며(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1항), 나아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2항). 이러한 가명정보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제33조의2)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용정보법 제40조의3).

8)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의의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로 불리는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신설의 핵심은 첫째는 정보주체권리의 강화이고, 둘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 사이의 공정경쟁 확립이다. 나아가 셋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이동권에 근거하여 본인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요청자 또는 요청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이동권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정보이동권은, 기존 금융사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독점해오던 것이 이제는 신용정보의 주체(고객)가 요구할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명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수집된 신용정보를 가지고 마이너리티 사업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 등 제대로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도, 개인에게도 금융통합서비스시대가 도래된 것으로 평가된다.

5. 그 밖의 최신 개정

데이터3법에 따른 개인정보법 개정이 2020년 2월에 이뤄진 이후, 총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20년 6월 9일의 개정(시행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29일 개정(시행 2021년 12월30일), 2021년 4월 20일의 개정(시행 2021년 7월 21일)이다. <2020년 6월 개정>은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2020년 12월의 개정>은 공정경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4월 개정>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IV. 구체적 법령해석 사례

1) 법제처 20-0569, 2021.1.22., 보건복지부 질의

<질의>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각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각주: 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 회답: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라 함)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명정보의 범위에서 질병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또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서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 역시 해당 정보의 주체는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명처리된 질병정보에 대해 그 정보주체인 개인을 특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질병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서만 가명처리된 질병정보의 수집·조사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그 정보를 제공받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법제처 15-0774, 2016.5.16. 민원인 질의

<질의>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 회답: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그 기업 및 법인이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함)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제15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신용정보”와 구분되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은 그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집·조사가 금지 대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무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그 수집·처리 등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